

노동권 보장 못한 근로기준법, 차별 부추기는 외국인고용법

광주·전남 외국인노동자 5만명
우리의 '이웃' 맞습니까

〈하〉 제도·관련법 정비 시급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도외시한 채 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는 각종 제도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보다는 낮은 수당과 방법을 동원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할 임금을 줄이고, 법망을 이용해 노동을 착취하려는 사업자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내국인과의 차별 조항이나 가혹행

모든 법 사업주들에 유리
'농림·수산' 휴일 규정 없고
숙식비는 임금에서 차감
사업장도 마음대로 못 옮겨
자자제도 소통창구 늘려
사회적 가족으로 보듬어야

위를 하거나 관련법을 어긴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들과 노동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여러 근로 분야 가운데 '농림·양식·축산·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1차 산업의 특성상 일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후 또는 재난 등의 요인으로 고정적인 휴일 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 사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휴식이나 휴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에 관한 지침'도 외

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또다른 차별이다. 이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임금에서 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 조건을 감안하면 숙식비는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최소한 숙박비와 식사비 가운데 하나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인 사업주 입장만을 고려한 외국인 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 등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성폭행,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등을 제외하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노동전문가들은 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어려운 까닭에 이 같은 점을 노린 사업주들의 횡포가 잇따르면서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외에도 자신이 일할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입국 전에 이뤄지는 근로계약,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한다는 점 등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광주민중의집 김춘호 변호사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데다, 임금을 못 받아도 여건상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웃으로 인정하고 보듬어줘야=광주·전남 외국인 근로자가 5만명을 넘어섰지만 광주시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다문화 가족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담당하는 구별 또는 동별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센터 격의 워터가 구별로 만드는 한편 시민단체 및 의료 기관들과 함께 상설 진료소를 개설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망과 워터, 진료소 등을 구축하면 사업주의 노동 착취나 가혹 행위 여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등 각종 일탈 행위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2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대학교가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교내 모든 출입구에 임시 대기소를 설치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전남대 "재난지원금 등 학생지원 방안 찾겠다"

등록금 반환 관련 설명회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일 전남대에 따르면 정병석 총장은 전날 오후 5시 학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각 학과 대표, 학생중앙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병석 총장의 발언은 그동안 주요 국립대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

운데 나온 것이어서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장이 등록금 문제 등을 놓고 학생들과 공개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타 대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은 아껴 쓰고 남기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교통 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면서 "집행이 보류된 사업비 등 사용 가능한 자투리 예산을 모두 긁어 모아 교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초중고 6~15일에도 학생 일부만 등교

시교육청 코로나19 대책
초·중학교 3분의 1만
고등학교 3분의 2만 등교
유치원·초교 돌봄교실 운영

정했다. 갑작스런 결정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 중지 사실을 늦게 파악하고,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둔 바람에 교과서 없이 원격수업을 듣거나 교과서를 가지러 등교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대처했다. 시 교육청은 또 오는 6-15일 초·중학교는 밀접도 감소를 위해 전체 학생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만 등교하도록 결정했다. 부분적 등교 중지는 각급 학교가 학년별 혹은 학급별 등 자율적 기준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학년별 기준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는 수능을 앞둔 3학년 수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기간 모두 등교하고, 1학년과 2학년이 같은 기간에 나눠서 등교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15일까지 부분적 등교 상황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너무 많은 학생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특히 학생들이 등교 전 자가진단 및 발열 체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2주 동안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자제를 함께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오늘 남해안 5mm 안팎 비
광주·전남 5일부터 장맛비

3일 남해안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5일부터는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남해안지역에 5mm 안팎에 비가 내리다 그친 뒤, 5일부터 11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장마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상층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의 북상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보됐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19-21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시민단체, 복구의회 백순선 의원 징계안 반발

"출석정지 30일은 면죄부"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 복구의회에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 '출석정지 30일'이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일 복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윤리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로 윤리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안(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비리의원 백순선 퇴출과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비리의원 백순선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은 비리 온상 복구의회라

는 오명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러한 결과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있다"면서 "복구의회 내 20명 중 14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를 감싸고 당론을 무시한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제명이 꼬리자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의 경직 신고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 업체에게 11건, 6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밝혀져 소속 정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의회 윤리위원회도 회부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